

의안
번호

813

울산광역시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제 출 일 자 : 2011. 2. 1(화)
-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 : 2011. 2. 1(화)
- 위원회심사 : 2011. 2. 16 (수)

2. 제안이유

-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가 2010. 3. 3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그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
-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사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는 기준 마련 (안 제4조)
- 관련기관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4. 근거법규

- 「담배사업법」 제16조
-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소매인 지정 신청시 이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담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비영리 법인에게 의뢰 위탁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
- 사실조사 업무는 2002년부터 구 법령에 따라 전문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여 왔으나,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사실조사는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, 위탁시에는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우리중구 에서는 2010년 7월부터 해당부서에서 직접 사실조사를 하고 있으나, 연간 건수가 90여건으로 현지출장 등 행정의 효율성이 극히 저조하여 본 조례를 제정, 전문기관·단체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,
참고로 우리시의 남구, 동구, 울주군은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, 북구도 조례 제정중에 있음.

담배사업법

제16조(소매인의 지정) ① 담배소매업(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)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1997.12.13, 1999.12.31, 2001.4.7, 2004.1.20>
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. <개정 1999.12.31>

1. 금치산자·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5. [제17조제1항](#)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(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1997.12.13, 1999.12.31, 2001.4.7, 2004.1.20>

④ 소매인의 지정기준·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[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](#). <개정 1993.12.31, 1997.12.13, 1999.12.31, 2008.2.29>

[제목개정 2001.4.7]

담배사업법 시행규칙

제7조(소매인의 지정절차 등) ① [법 제16조제1항](#)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[별지 제12호서식](#)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

1. 점포(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)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
2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7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, [제7조의2](#)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「[행정절차법 시행령](#)」 [제11조](#)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3.3>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[제7조의3](#)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[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](#). <개정 2010.3.3>

- ④ 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3.3>
-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(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)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신설 2010.3.3>
-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 <신설 2010.3.3>
- ⑦ 제6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3.3>
- ⑧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,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. <개정 2010.3.3>
- ⑨ 제8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(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8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,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. 다만,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. <개정 2010.3.3>
- ⑩ 제9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국가유공자증명서류,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3>
- ⑪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3>
- ⑫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2항의 처리기간을 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3>
- ⑬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,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·보관하여 제조업자·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3>
- [전문개정 2009.7.1]

부칙<기획재정부령 제131호, 2010.3.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한 소매인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